

# ‘야권분열=필패’ 정답 서로가 알면서도 … ‘동상3夢’ 아리송한 셈법

야권연대 신경전 치열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문제를 놓고 정치세력 간 ‘동상이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정면 승부를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先)혁신-후(後)연대’라는 단계적 연대론에 군불을 끓는 모습이다.

야권 분화 내지 분열이 고착될 경우 야권의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혹시 ‘안철수 신당’에 밀려 야권의 맹주 자리까지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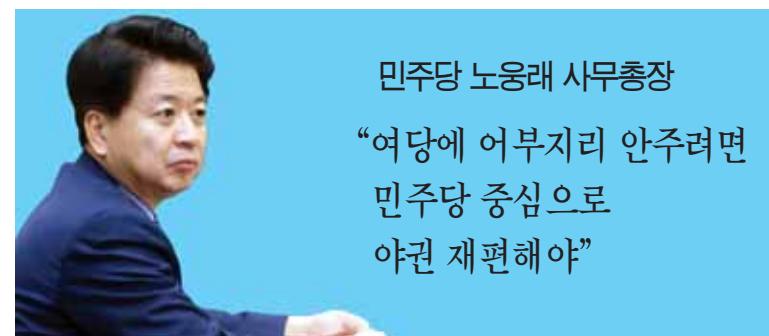
반면, 독자세력화의 시험대에 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진보정당 존재감 찾기에 나선 정의당은 “연대는 없다”고 선 길로 일관하는 등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길 대표는 16일 YTN ‘정찬배의 뉴스정석’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2:3등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양쪽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안철수 신당과의 협력 가능성 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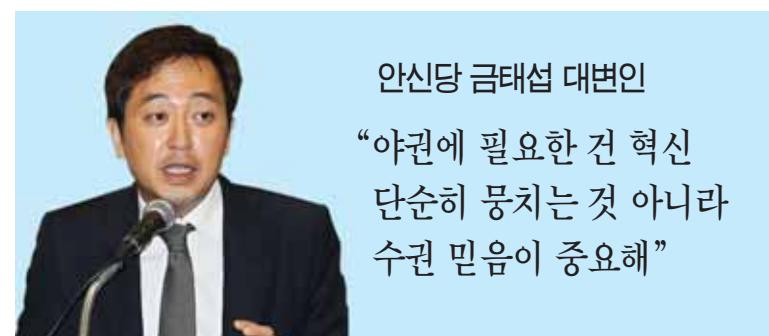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정치혁신, 변화를 통해 정면승부를 하고, 그러고도 정부·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구도가 된다면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전개돼온 기계적, 정치공학적 단일화 불가론을 분명히 하면서도 ‘선 혁신-후 연대’라는 단계적 연대론을 꺼내든 셈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안철수 신당’과 관계 설정에 대해 “우리는 (안 신당에 대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연대 대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적절한 경쟁과 균형의 원칙을 지켜가며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었다.

야권 분열 때 선거 패배 우려가 큰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연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  
“여당에 어부지리 안주려면  
민주당 중심으로  
야권 재편해야”



안신당 금태섭 대변인  
“야권에 필요한 건 혁신  
단순히 뭉치는 것 아니라  
수권 믿음이 중요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  
“세력과 구조를 바꿔야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많이 낼 것”

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나와 ‘안철수 신당’ 측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연과 생각은 계속되는 게 필요하다”며 “경쟁이 아닌 다른 큰 상생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흥미영입니다’에 출연, “세력과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연대를 고려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최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주)’

의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야권에 필요한 건 혁신이지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뭉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단일화 회의론’을 거듭 역설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전날 교통방송 라디오 ‘벽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 “세력과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연대를 고려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최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

뒤 문화전당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강기정 국회의원 등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제2차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낙연 20일·주승용 27일 전남지사 출마 선언

설 민심 주도권 잡기

그동안 차기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전남지역 곳곳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들이 설 명절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민주당 이낙연(담양·합평·영광·장성) 의원은 오는 20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1시30분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선언과 함께 전남 발전방안 등의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출마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도 오는 2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주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와

세부 내용, 참석 인물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전남발전 방안과 지역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들이 설 명절 연휴에 앞서 출마 선언에 나서는 것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설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 경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민주당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민심이 중요한 만큼 유력 후보들이 명절에 앞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 노웅래 “호남 광역단체장도 전략공천 가능해”

## 강기정 “중진 차출·퇴진론 아닌 개혁공천해야”

6·4 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의 공천 등 선거사무를 총괄할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이 16일 호남지역에 전략 공천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임 당직자 기자간담회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로 새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물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민심에 따라 전략공천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는 호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인

물다운 인물, 최강·최적의 인물을 공천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답했다.

노 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등에 출연해서도, 이를 바 ‘중진 차출론’에 대해 “최적의, 최강의 후보를 상향식 공천과 투명한 공천시스템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해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 3선 제한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사무총장이 중진 차출론과 호남 중진 퇴진론을 거론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며 “중진차출론이 아니라 호남개혁 공천론으로 가야 하고 중진퇴진론이 아니라 차세대 인물양성론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기는 정권 차원의 호남에 대한 차별 고립정책에, 민

주당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리더십의 부족, 대선패배 이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은 하지 않고 호남과 비호남으로 나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 국민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후보 경선의 역동성을 보여줘야하고, 책임공천제를 도입해 공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감하게 혁신의 리더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도 책임공천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 전국 500여 시민단체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하자”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지방선거 전에 협력해야 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앞서

유보장 ▲유권자 참정권 보장 ▲지방의회 대표성 제고와 특정 세력의 독과점 해소 ▲경제적 약자의 진출과 후보자 간 공정경쟁 막는 장애물 제거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함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93

조 1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의 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막는 데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정권 보장을 있다면 민심에 따라 전략공천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는 호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인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주)’

은 등과 제도 제한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우선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

현을 포함적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93

을 제한하는 선거